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돈희



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은 실시 직후부터 40년에 가까운 동안 심심치 않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때로는 '평준화 망국'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전면적 부정의 어조를 띤 것도 있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온건한 태도를 지닌 것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그 동안의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애초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소유했던 절대적인 힘의 행사를 통하여 강행한 것이었다. 그 결과 중등사회의 말살을 초래하였고, 물리적 여건과 교육적 환경에 있어서 학교 간에 명백한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서 학교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또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없이 모든 고교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과하였으며, 국가의 경쟁력을 주도할 인재의 체계적인 생산력을 거세해 버렸다. 물론 약간의 보완은 있었으나 근본적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우선 입안 당시에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던가를 회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고등학교에의

되었고, 출신학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대물림'되는 현상을 낳았다. 당시의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대학입시에 사달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풍토와 거의 일치한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교육적-사회적 문제가 지금의 고교생들보다는 훨씬 어린 중학생들에게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평준화 이전에는 초등학교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러

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평준화 상태의 교육이 지닌 문제들만을 보고 그 폐지를 서둘러 주장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평준화에 의해서 성취된 성과들만을 보고 원형 그대로 존치시킬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할 것도 아니다. 효율성이란 학교교육이 지닌 다면적인 목적의 체제에 비추어 필요악이 최소화된 상태라고 판단될 수 있을 때 그 본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는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고교 평준화 정책이 유지되면 학교의 선택권과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경직된 획일성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평등교육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육을 시킨으로써가 아니라 '각자에게 유리미한 학습의 경험'을 하게 할 때 그 의미를 다하는 것이다. 둘째, 사립학교는 자체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여 점차적으로 자율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발전이나 경쟁력의 장기적인 대비책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과 충원의 계획에 따라서 특수목적 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의 대안적 제도를 계획성 있게 병존시키고 그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반성

입시준비를 위한 과중한 학습부담은 중학생들의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을 위축시켰고, 입시위주의 교과목 편성으로 인하여 파행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며, 지나친 경쟁의식은 이기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였고, 지역간-학교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과중한 과외 교습비의 지출로 가정과 국가의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일류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집착은 치맛바람과 입시과동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과외교습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의 공신력이 실추

한 가혹한 경험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는 또한 기억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시 평준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다.

어쩌면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제도에서 혜택을 누린 집단에 속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4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이미 그러한 심각한 사태를 모두 망각하였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바라는 바인 인재개발의 효율성에 너무 집착해 있는지도 모른다. 당시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우악스런 정책이라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대 못미친 11·15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주택금융축소가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당장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준의 강도높은 단기 대책이 아닌데다 전세가격의 안정을 위한 방안도 빠져 있어 '속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시장관리 능력은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급리와 부분별한 대출금융관행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대란을 촉발시킨 증부세 증가, 양도세제 강화,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은 전혀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11·15 대책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집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가뜰이나 지방자금이 서울로 몰리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확대 정책이 오히려 가수요를 부추겨 지방건설산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데어 죽고 얼어 죽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양극화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또다시 수도권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차제에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권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공급 정책만이 부동산 경기의 양극화를 막고 수도권의 '부동산 광풍'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시장인 부동산을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하면 양극화만 더욱 심화될 뿐이다.

위기의 전남농업, 친환경만이 살 길이다

전남지역의 과실, 채소 등 친환경특산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고품위자와 담양 딸기, 보성 녹차 등 20개 지역특산품의 친환경 인증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가격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최고 4배까지 높다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전남 농업의 현실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의 비중은 높지 않다. 농민들의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만 재배면적과 품목은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어 결실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도내 20개 특산품의 친환경 인증면적이 4천700여ha, 생산량은 12만8천여 t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친환경 특산품의 재배면적을 2009년까지 현재의 10배 정도인 4만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국가의 대표적인 농가소득 보전정책이었던 추곡수매제는 이미 폐지됐고 잇달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중국산 등 외국산 농

산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협상 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쌀을 비롯 농업 전반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으로 청정 농산물을 생산, 외국산과 차별화하는 것 뿐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는 웰빙바람이 불고 '머거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판로 부에 제한돼 있어 결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도내 20개 특산품의 친환경 인증면적이 4천700여ha, 생산량은 12만8천여 t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친환경 특산품의 재배면적을 2009년까지 현재의 10배 정도인 4만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국가의 대표적인 농가소득 보전정책이었던 추곡수매제는 이미 폐지됐고 잇달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중국산 등 외국산 농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고영만
광주·전남 수출이 위기에 처해 있다. 작년도까지 연속 3년동안 평균 30% 이상 증가하면서 급성장상을 보이던 지역수출이 올 들어 3·4분기까지 10% 후반대로 증가율이 떨어지며 대폭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지금까지 지역수출을 주도해왔던 자동차 수출이 주춤하면서 전체 수출증가가 둔화된 측면도 있으나 환율 하락, 원자재가 상승 등 약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우리 업체를 가장 괴롭힌 약재는 원화강세로 인한 원·달러, 원·엔의 하락이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2003년 말 이후 올 10월말까지 20% 하락했고

독자마당 철도공사 적자, 언제까지 국민에게 전가 할건가
철도요금이 11월부터 평균 9.3%나 올랐다. 열차의 경우 KTX가 나온 이래 국민들에게 엄청난 교통요금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하면 철도공사적은 적자타령인데 대체 그 원가계산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의 경영수지 악화를 무조건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자체의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상률이 왜 턱없이 높은가. 공공요금이라면 응당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비슷하게 올려야 하는데 봉급생활자들의 임금이 2%이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3%에 그치는데 어떻게 3~4배에 이

無等鼓 이지메
일본 열도가 집단괴롭힘(이지메)으로 인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최근 일주일새 3명의 남녀 중학생이 자살했고 자살을 예고하는 편지도 10통을 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에게 자살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했으나 과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통과 청소년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세 계적 현상이다. 이혼과 가정 폭력 등 가정의 해체와 폭력적 성향이 강한 대중매체나 컴퓨터 오락게임이 널리 보급된 것이 한 원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유독 심하다. 이지메 등의 이유로 학교 깊은 배타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런가하면 약자를 잡아보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일본인 특유의 국민성이 원인이라는 시각도 설득력을 갖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도 집단 괴롭힘이 사회 문제화되던 오래다. 그동안 일들만을 중시한 채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소홀했던 부작용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집단 괴롭힘은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미'를 불과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다는 것은 참내하기 힘든 고가 싫어져 연간 30일 이상 등교하지 않은 초·중등학생이 연간 8만명을 넘을 정도로. 학교뿐만 아니라 성인사회에서도 이지메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사회가 이질적 존재를 구별하는 경향이 지나친데다 뿌리

원산지 조사 강화로 중국산 표고 북한산 둔갑 막아야
부모님이 한평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데, 최근 중국산 때문에 농사짓기 힘들다며 아예 버섯 농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 표고버섯 농가들의 경우 참나무 수급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목 대신 중국산 톱밥 배지까지 들어오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게다가 재래시장에서는 값싼 중국산 표고버섯이 북한산으로 둔갑돼 버섯이 팔리고 있다. 북한에서는 표고버섯이 재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영업 직원 말만듣고 보험 가입했다 낭패
3년 전 회사 상사의 친구라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3년 만기 저금예를 들었는데,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저금 만기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받아야 할 저금액이 원금보다 적었다. 약간 황당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변동금리와 위험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년 전 그 보험에 대해 영업 사원은 "은행이자보다 높고 보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저금 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고 항의했더니 보험회사는 잘못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